

정부 유전개발 홍보 “부풀리기”

UAE 10억배럴은 기회보장 불과 ... 원유 무상저장은 공짜배려

정부가 발표한 유전개발 성과가 부풀려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래기획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와 관련기업들에 따르면, 2011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아랍에미리트(UAE) 10억배럴 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 권리는 단순한 참여기회 보장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1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유전광구 참여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매장량 10억배럴 이상 유전에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얻었으며, 미개발 광구 3곳도 최대 100% 지분으로 참여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600만배럴의 원유를 비축유로 확보함으로써 7000억원의 구매비용을 절감하게 돼 해당 비축시설의 임대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10억배럴의 유전 개발에 참여한다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14년 1월 이후 계약이 만료되는 석유관련 메이저를 대신해 석유공사와 국내기업들이 지분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해당 MOU에 대해 우리나라가 우선적인 참여가 아닌 참여기회를 부여한 정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주도한 미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지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는 600만배럴 비축유 문제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원유 600만배럴을 국내 비축시설에 무상 저장하고 유사시 우리나라가 사용토록 합의한 것이 우리나라가 7000억원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아랍에미리트도 저장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에 에너지 Win-Win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몇 년 전부터 자국 원유를 국내 비축시설에 무상 비축하기를 희망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 유전 참여 기회를 챙기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에 비축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상당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공급국의 지위를 이용해 일본에서도 무상으로 비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13>